

	<h1>보도자료</h1>	2016. 9. 30(금)	
		작성 · 문의	<총괄>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200-2056) <우레탄트랙 대책>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서홍원 (☎ 044-201-6750)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장 김성호 (☎ 044-200-7592)
* 엠바고 : 9.30(금) 11:00(회의종료) 후 사용 / 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우레탄트랙 (국조실, 환경부, 교육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국조실, 고용부)			

유해 우레탄트랙, 전면 교체한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등 확정
- (우레탄트랙) KS 기준 재설정, 새로운 기준 따라 공공체육시설·공원 등까지 전수조사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등 실천 강화

□ 정부는 '16.9.30(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문체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장관, 기재부·교육부·행자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 차관, 중기청장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

□ 얼마전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기준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초·중·고 11,690개교중 2,763개교에 우레탄트랙 설치, 이중 1,767개교 기준 초과(16.6, 교육부)

○ 첫째, 현행 우레탄트랙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 둘째,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을 모두 조사하여 새로운 KS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전면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학교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하)를 추진하고, △나머지 우레탄트랙은 새로운 KS기준으로 전수조사한후 교체를 추진(교육부, '17~)한다.
-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새로운 KS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시설은 모두 교체('17~)할 계획이다.
 - * 종합운동장·축구장 등 982개 / 도시공원·하천변·아파트단지 등 19,335개
- (어린이 놀이시설) 기존 법령에 규정된 설치검사, 2년단위 정기검사 과정을 통해 문제시설을 신속히 교체(안전처·교육부·지자체, '17)해 나간다.
 - * 어린이집·유치원 등 총 67,522개중 19,335개소에 설치
- 셋째, 현장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시설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 (현행) 준공검사시 업체가 제출한 제품으로 검사 → (개선) 현장 시료 채취·검사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 >

-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6.3.10)에서 확정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의 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수사례 : 붙임 4)
-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16.4)', 비정규직 차별 유무 점검 의무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 * ('16.1) 72천개 협력업체,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6.8) 103천개, 66조원
 - ** 협력업체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규모(억원) : ('15) 4.2 → ('16.8) 28.1
 - ***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 ('15) 772명, 504백만원 지급 → ('16.9) 1,169명, 1,245백만원

-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 현재 대기업 및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하청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16.12)하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16.9)하고,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사무관리직 등 임금정보 공표('16.8~, 매월) / 100인이상 사업장 인력운용 실태조사 발표('16.12)

< 국가정책조정회의 관련 >

-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9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 정책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왔다.

<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성과 >

구 분	주요 안건
국정현안 대응 (15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공항보안 강화대책('16.3) △공장신증설·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15.7) 등
국민안전 강화 (9건)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16.4) △당류저감 종합대책('16.4) △뉘시어선 안전관리 대책('15.10) 등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7건)	△4대악 근절 대책('15.1, '16.1, '16.7)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16.4)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지원대책('15.10) 등
핵심개혁과제 (8건)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15.12) △기술금융 제도 개선방안('16.4)

- 우레탄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2,763개교)를 대상으로 KS기준('12.12)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교(1,767개, 64%)에서 유해물질(납)이 기준치를 초과
 - * 학교체육시설 우레탄트랙 KS기준 (mg/kg)
: 납(Pb) 90 / 카드뮴(Cd) 50 / 6가크롬(Cr⁶⁺) 25 / 수은(Hg) 25
 - 우레탄트랙은 학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설치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유해 우레탄트랙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

< 우레탄트랙 설치 현황 >

구 분	설치 시설 수
학교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11,690개교 중 2,763개교(24%)에 설치
공공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축구장 등 21,317개소 중 982개소(4.6%)에 설치
지자체 시설	도시공원(14,653개), 하천변(3,838개) 등 총 18,491개소 설치 (추정)
어린이 놀이시설	유치원·어린이집 등 67,522개소 중 19,335개소(27%)에 설치

-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해물질 관리 기준 재정비

□ 먼저,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

-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여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 이와 함께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환경부, '17.1)

* KS기준 개정 검토항목으로 우레탄트랙 이용행태, 인체영향(위해도) 등을 평가하여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우선 교체

2. 유해 우레탄트랙 교체

□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 실시

- ① (학교) 기존 전수조사('16.3~6)에서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하~)하며,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

교체 대상	우레탄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1,745	901 (51.6%)	753 (43.2%)	86 (4.9%)	5 (0.3%)

* 기준 초과된 1,767개소 중 22개소는 학교 이전 등으로 제외

-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교체 추진

- ②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은 신속히 교체

* 단, 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 ('16.7~10)으로 현행 기준 초과 시설은 새로 정비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17년 우선교체 추진

③ (어린이 놀이시설) 현행 설치검사와 2년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 교체하는 한편,

-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의 재정비를 검토

* (현재) 납, 카드뮴, 수은 및 67크롬 화합물 총합 0.1% 이하, 폼알데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

3.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
 - 그동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시 트랙손상 등을 우려하여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검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시료 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
 - 또한 우레탄트랙 내구연한(9~10년)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

- 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15.9.15)을 토대로 지난 3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마련·추진('16.3.10, 국가정책조정회의)
 -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넓은 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위해 현장의 노사를 중심으로 개혁 실천에 노력한 결과,
 -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시작
- 상생협력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하청의 산업안전관리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취약근로자 보호 : 정규직 전환지원('15, 340명 → '16.8, 1,279명),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16.4)
 - 인사관행 개선 : 기업의 78.3%가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 개편중(경총, '16.5)
-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총력

노동개혁 4대 입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점진적 단축 (최대 68시간→52시간) ● 통상임금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이상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부리산업파견확대 ● 생명·안전분야 파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재해보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지급액(임금의 50%→60%) 인상 ● 지급기간 30일씩 연장

□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과 보완계획은 다음과 같음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 먼저,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중요한데, 점검결과 이를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

* 대기업·공공기관이 신용을 보증하는 상생결제채권을 원·하청간 결제에도 활용하여 하청·협력업체들이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매출채권을 현금화

** ('16.1) 72천개 협력업체,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6.8) 103천개, 66조원

□ 또한, 원청·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

* 협력업체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규모(억원) : ('15) 4.2 → ('16.8) 28.1

○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협력업체의 위험한 작업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의 참여기업도 증가*

* ('15) 원청 885개소, 협력업체 7,904개소 → ('16) 원청 994개소, 협력업체 8,584개소

○ 대기업 등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사례도 확산

* ('15) 53천개소 중소기업, 131천명 → ('16.8) 39천개소 중소기업, 118천명

□ 이와함께, 하도급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자동차·건설·전자·전기·의류·금속·화학·식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16.4~8)하여 1,190억원('16.7. 기준)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조치

○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없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15.3~)하여 111억원('16.7월 기준)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조치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선도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각종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

* 현재도 2·3차 협력업체 이용이 가능하나, 대기업·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

○ 30대 기업 간담회,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실천을 유도('16.10~)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

○ 기업·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금 활용 등에 대한 밀착상담 등 컨설팅도 더욱 강화

2. 취약계층 보호 및 낮은 제도 개선

-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 감독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하도록 하여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이 확대되는 등 보호를 강화

*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 ('15) 772명, 504백만원 지급 → ('16.9) 1,169명, 1,245백만원

-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16.4) 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지원인원도 크게 증가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실적 : ('15) 340명 → ('16.8) 1,279명

- 능력·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 비중 : ('15) 100인 이상 사업장의 5.4% → ('16.6) 12.4%

-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중인 사업장이 78.3%(경총, '16.5, 300인 이상 88개 등 총 162개 사업장 설문조사)로 나타나는 등 현장의 인사체계 개편 노력이 확산

- ➡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마련('16.12)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

- 능력중심의 인력운영이 확산되도록 연공성 정도, 임금수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핵심사업장에 대해 지원과 지도 활동을 지속 실시

- 또한, 우수사례 홍보, 국제컨퍼런스 개최('16.11) 등과 함께 주요 사례 등을 토대로 '능력중심 인력운영 성과보고대회'를 개최('16.12)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붙임3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관련 주요 추진상황 (요약)

주요 정책 (소관 부처)	'15년 실적	'16년 실적	비 고 (향후 계획)
상생결제시스템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1월 72,329개소,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3,457개소, 66조 원(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선도, 2·3차 협력업체의 수혜율 제고
상생협력기금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563개 중소기업 3,995억 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8개소, 4,827억 원(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세액공제 기한 연장 (16년→ 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807명(협력업체 근로자), 4.2억 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520명, 28.1억 원(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청 상생협력의 경우 기본원금도 사용 가능토록 추진(12월)
공동근로복지기금 (고용부)	* 금년 1월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62명(협력업체 근로자), 11.1억 원 조성(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업종별 협회 등 대상으로 밀착상담
안전보건 공생협력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885개소 원청 7,904개소 협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994개소 원청 8,584개소 협력업체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천개소 중소기업 131천명(근로자·채용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천개소(8월) 118천명(근로자·채용예정자) 	-
하도급대금 지급 현장점검(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82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0억 원(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미지급 빈발 업종 현장점검 지속
익명제보센터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2월 65억 원 지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1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조치(6월) 	-
비정규직 차별 현장점검(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72명(비정규직 근로자), 504백만원 지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69명, 1,245백만원(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유무 현장점검 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79명(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고,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9월말)
체불임금 소액채당금 지원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759명, 352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239명, 703억 원(7월) 	-

□ **성과공유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 **사내근로복지기금**

- ((주)세아베스틸) 특수강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및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원·하청 근로자 차별 없이 근로자의 날에도 똑같은 선물 지원, 자녀 장학금 제공
 - ‘15년 협력업체 30개소, 570여명에게 12천만원 지원,
’16년 협력업체 34개소, 1,370여명에게 45천만원 지원(예정) 확대
- ((주)한국야구르트)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 선물, 명절선물, 건강검진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5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 실시
 - ‘15년 협력업체 7개소, 520여명에게 4천만원 지원,
’16년 협력업체 6개소, 1,300여명에게 39천만원 지원(예정) 확대

○ **공동근로복지기금**

- (현대엘리베이터) 57개 설치협력업체에서 각 100만원씩 57백만원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658백만원 출연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에 사용(정부는 228백만원 지원결정, ‘16.7.12)
- ((주)삼흥콜렉션) 하청협력업체인 삼이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자기계발비,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등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 (주)삼흥콜렉션 2.5억, 삼이 0.5억을 각 출연하여 공동기금 3억 조성 (정부는 150백만원 지원, ‘16.9.13지급)

○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한국노총 지역지부, 경제협회, 창원시, 지방고용노동청, 노사발전재단)과 창원시 10개 기업체(경남은행, (주) 건화, (주) 무학, (주) 세아창원특수강 등) 대표는 ‘소득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와 1사1고용 더하기 운동 협약’ 체결(‘16.8.31)
 - 정규직·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에 힘쓰고 고임금 자제 및 비효율적 경비 절감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으로 청년 채용 등 고용을 확대하기로 함
- (SK하이닉스) ’16년에도 노사 각각 임금인상분의 10%를 재원(66억원)으로 조성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노사합의(6월)
 - ‘15년 임금공유제 시행(11개소 협력업체 근로자 4,700여명 지원)

□ 원·하청간 안전보건관리 및 교육훈련 협력 강화

○ 산업안전 공생협력 프로그램

-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에 참여(‘12년~)하여 원·하청 모두 재해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 달성(사망재해 없음)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체계 운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을 유도
 - * 원청 재해율(%): (‘11) 3.82 → (프로그램 참여) → (‘12) 0.46 → (‘15) 무재해
 - 협력업체 재해율(%): (‘11) 1.48 → (프로그램 참여) → (‘12) 0.47 → (‘15) 0.20
- (동양시멘트(주) 삼척공장)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감전 및 끼임, 낙하, 소방 등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체험교육 실시
 - 협착, 추락, 낙하 등 주요 재해유형과 주요 공정별로 안전분야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안전 챔피언 교육과정’ 운영
- (현대모비스(주) 창원공장) 조립 및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던 실명 등의 유해성이 높은 메틸알코올을 유해성이 적은 무수 에탄올로 대체적용 (물질대체에 따라 연간 27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11백만원→ 38백만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포스코) 기술역량 부족, 작업효율 저하 등 인재양성 체계가 미흡한 협력업체와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훈련 실시(‘15년 334명) 및 학습조직화 사업 참여
 - HRD컨설팅 등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의 성장프로세스, 객관적·공정한 평가·보상시스템 등 교육훈련 역량향상체계 구축
 - * 크레인 고장건수 감소: ‘13년(1,835건) 대비 ‘14년 20%, ‘15년 15% 감소

□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 (유한킴벌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대 실천사항을 도입·시행(계약체결,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하도급거래서 서면발급 보존)
 - 협력사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14.1.~현재) 및 대금 지급기일·횟수 개선(월 1회 이상 마감 및 10일 이내 지급)
- (SK(주) C&C) 협력사와 동반성장 펀드 조성을 통한 저리 대출(26개사 92억원), 협력사 하도급 대금 100% 현금 결제 시행
- (CJ대한통운) 협력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펀드 조성(260억원), 협력사 대출시 금리 2%인하, 긴급자금 선급금 지급

□ 낮은 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 개선

○ 임금체계 개편

- (LG이노텍) '14년 초 이후 2년여간 노사 협의를 거쳐 노조가 있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생산직근로자 호봉제 폐지, 성과·역량에 기반한 임금체계 올해부터 시행('16.2월)
 -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사원이 조기진급할 수 있도록 발탁진급제도 신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 현장 팀장과 임원이 참여하는 공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함
- (SK하이닉스) '15.10월 이후 9차례의 임금체계개편위원회 논의, 일본 노사단체 벤치마킹, 10차례 임단협 교섭 등을 거쳐 임금체계 개편 합의('16.7월) →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는 최초
 -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에서 직무 60%, 경력 30%, 업적 10%가 반영되는 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
 - 직무급은 직무 난이도에 따라 결정
 - 업적급은 월 직무급의 100%를 연 2회 지급하되, 전년도 최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추가 20% 지급토록 하여 인센티브 폭 확대
 -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직무급과 경력급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임금 문제도 해소

○ 능력중심 인사관행 확립

- (코오롱 인더스트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태도, 능력, 업적을 기반으로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 평가결과와 보상-교육훈련의 연계성 강화, 연공급 완화, 능력중심 승진제도 도입해 근로자에게 동기부여
 - 직급별 육성목표와 기대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직원들의 성장과 능력향상을 독려함과 동시에 업무성과가 부진한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과개선을 지원
- (신세계) 전 직원 대상으로 능력·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 통해 차등 보상, 공정인사 지침에 따른 평가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
 -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연봉등급을 결정하고, 평가 및 성과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차별화하고 우수자에게는 선발교육기회를 부여함
- (IBK 투자증권) 노사간 공감을 토대로 최대 30개월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과 적극적 퇴직관리를 실시하는 등 능력중심 인력 운영 시스템으로 개편
 - '13년 이후 처음으로 13명의 청년 신규 채용 결정